

與野 MZ세대 공략

김기현 “1000원 학식 확대 등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경희대 방문… 학생들과 식사
당-학생회 연결 채널 구축 계획
“청년들의 정책 참여 이뤄져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 천원의 아침밥 현장을 찾아 이재백 총학생회장, 채희선 부총학생회장 등과 식사 및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MZ 세대와 함께 ‘1000원 학식’을 먹으며 소통에 나섰다. MZ 노동조합과 당 지도부 간 ‘차맥’ 회동에 이은 소통 행보다. 최근 여당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 하락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과 직접 만나 애로 사항 해소 등으로 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을 찾았다. 경희대가 지난 13일부터 정부와 함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나선 가운데 김 대표가 현장 상황

점검차 학생들을 만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경희대 이재백 총학생회장, 채희선 부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가 함께했다. 당에서는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교육

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측 인사도 함께했다.

학생들과 식사하기 전 김 대표는 “식사문제만큼은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현장에서 학생들) 말씀을 들어 보려고 왔다”고 했다.

자리에 함께 한 학생들은 “다양한 학교가 1000원 학식 혜택을 누리고, 사업도 이어졌으면 한다. 아침뿐 아니라 점심, 저녁도 정부나 학교에서 관심을 주면 학생들 부담도 줄어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정부의 대학 관련 사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취업에 도움 되는 산학연계 체험 학습 필요성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 김 대표는 “아침 식사 문제는 대상이나 지원금을 넓히는 방식으로 당 정책위원회에 주문하고 있다. 급식의 질을 넓히는 것도 고민해볼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의 민심, 민생의 목소리를 바로 듣는 사람들이 정책 입안에 참여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게 앞으로 가야 할 생활 정치”라

며 “목소리를 직접 녹여낼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수립, 입안에 참여하는 채널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 차원에서 각 대학별 총학생회와 만나는 상시적인 채널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학생들과 식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책상에 앉아 행정 하는 것 이상으로 민심의 생생한 목소리를 녹여내 행정 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수요는 매우 창의적인 것들인데 (이들) 실천하도록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당 정책위가 정책 입안 활동 과정에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식 채널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별 총학생회와 당과 채널을 만들어 상시적인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주 4.5일제 향해 나아가야”… 청년정책 입법 힘 신는다

더불어민주당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
“尹정부 근로제 개편안 수용불가”

내주 청년정책 관련 발표 예정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69시간제 노동제’ 발표 후폭풍에 따른 반사효과를 얻으면서 청년 정책 입법에 서두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에 상한선을 높이자는 정책을 발표한 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한선을 주 60시간 근로제를 제안하며 정책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20·30대 세대들로 이뤄진 MZ노조에서 이에 대거 반발하고 나오면서 민

주당은 대야 공세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 세대의 민심이 정부에서 급격히 떠나간 이유는 주69시간 노동제 이슈가 가장 크다”면서 강력한 대야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MZ세대 노조로 구성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

회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한노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주69시간까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준환 새로고침 협의회 의장은 “한국은 이제 일을 조금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

편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산정 단위 확대였고 고용노동부가 취지로 언급했던 노동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공짜야근은 이 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도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40시간을 지키게 할지 불가피하게 연장근무를 해도 최소한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에 주5일제에서 주4.5일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질레가 노동시간 주당 40시간 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노동시간 감축을 통해서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

는데 우리만 역주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 주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노동시간 개악 시도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등을 포함한 청년 정책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화제가 된 반도제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은 MZ 세대가 놓은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민주당의 새로운 정책위의장으로 정채을을 진두지휘할 김민석 의장은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긴급9대 민생 프로젝트’와 함께 청년 정책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해 “다음주에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尹 대통령 “저출산 문제, 일회성 대책 아닌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역

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정부지원과 문화적·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병행돼야 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과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고 촘촘하게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

적 요소,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이고 일회성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집단심층 면접(FGI)을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으로 이뤄졌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